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

허원제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wonjea.huh@keri.org)



지난 6월 9일, 스페인 정부는 1,000억 유로 규모의 EU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위기에 빠진 은행권을 지원하여 어려운 국가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제금융으로 은행권 발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누적된 부채와 재정적자는 여전히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스페인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최근 5년간 연 15.2%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올 1분기 현재 GDP의 17% 수준에 육박한 상태이다. 이러한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는 의무사회보장, 보건,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회공공서비스분야의 지출 확대와 무분별한 지자체 SOC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등에 의해서 비롯되어 왔다.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흡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실화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중앙정부를 압박하여 왔고, 국가부도 위기를 앞당길 수 있는 촉발제로 작용할 것이다. 스페인은 한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보였던 나라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91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급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악화되고 있어 스페인의 경우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방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지방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심성 사회복지 지출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대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강화 및 행사·축제 비용 정비를 통해 지방재정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 부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무체표에 잡히지 않는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세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1. 논의배경

- 스페인의 국가경제 위기는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 세계경제의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음.
 -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은행 부실화를 초래했고,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스페인 정부의 구제금융과 은행 국유화 조치는 국가부채를 3~4년만에 큰 폭으로 확대시킴.



- 다른 EU회원국들에 비해 건설했던 스페인의 국가채무비중은 2007년(36.3%) 이후 5년 만에 2배 이상 뛰어 2012년에는 7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EU평균과의 격차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표 1>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추이 (2007~2012)

(단위: %, %p)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p)
스페인 (A)	36.3	40.2	53.9	61.2	68.5	79.0	8.5
EU평균 (B)	59.5	64.0	74.4	79.6	82.4	84.5	5
격차 (A-B)	23.2	23.8	20.5	18.4	13.9	5.5	-

주: 2012년도 수치는 당해년도 4분기까지의 예상치로서, 스페인의 경우 구제금융 비용이 미반영된 상태임
 자료: Banco de España, 『General government debt』, 2012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2

- 스페인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국가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유럽연합(EU)에 1,000억 유로 규모(약 146조원)의 구제금융을 신청
 - EU의 구제금융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은행권 지원에 한하여 집행될 예정
- 그러나 구제금융 신청 후에도 여전히 스페인 경제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 EU집행위와 IMF는 구제금융 비용을 고려하면 스페인의 2012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계속 치솟으며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연 7%대 진입* (2012년 7월 23일 기준: 7.5%)
 - * 10년물 국채금리가 7% 이상인 유로존 국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 스페인 경제위기의 또다른 원인인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은행권에 제한된 구제금융만으로는 현재 스페인이 직면해 있는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1) '07년 162억 유로에서 '12년 1분기 1,527억 유로로 약 5년간 9.4배 증가하여 은행권 부실자산규모는 GDP 대비 14.37% 수준을 기록

- 구제금융으로 은행권 발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누적된 부채와 재정적자가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재로 잔존하기 때문
-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는 지금의 스페인 국가재정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며 국가부도 위기를 앞당길 수 있는 촉발제
 - 스페인의 지방부채는 최근 5년간 연 15.2%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음.
 - 2008년에 이미 1,000억 유로(당시 GDP의 10% 수준) 도달
 - 2012년 1분기까지 5년 남짓 기간에 1,820억 유로를 기록하며 GDP의 17% 수준에 육박

<표 2> 지방부채와 은행권 부실자산의 비교 (2008~2012.Q1)

(단위: 억 유로, %)

	2008	2009	2010	2011	2012.Q1	연평균 증가율
지방부채	1,044	1,257	1,549	1,755	1,820	15.2
은행권 부실자산	630	933	1,071	1,397	1,527	25.7

자료: Banco de España, 『Liabilities outstanding and debt according to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2012

- 전체 지방부채가 은행권의 부실자산보다 큰 규모로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 부실자산의 심각성 만큼이나 지방부채의 문제 또한 심각
- 지방부채는 국가부채와 직결되어 있어 지방재정 부실화는 곧 국가재정 위기를 이끌 수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
 - 지방재정 부실화에 의한 국가재정 위기 시에는 재정적자, 국가신용도 하락 등의 직격탄을 맞아 전면적인 침체 국면에 노출
 - 지방부채가 중앙정부의 자금조달 능력을 경색시켜, 현 스페인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는 국가 디폴트를 앞당기게 될 것임.
- 본고에서는 스페인 국가부도 위기의 중요한 원인인 지방재정 부실화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스페인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

- 스페인 지방재정은 경쟁적 지방선거 공약사항의 이행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출확대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사회공공서비스분야(보건, 교육, 의무사회보장 등)에 대한 비용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부실화
 - '90년대 지방선거 공약경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무상의료·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사회공공서비스분야 비용 지출은 일반정부의 한해 총 지출액의 36% 이상에 달함.

- '75년 민주화 이후 지방 분리주의는 지방정부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지방정부는 복지·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 보유²⁾를 통해 자율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
- '08년 부동산 버블 붕괴에 의해 초래된 저성장 및 고실업 등 지역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방정부는 의무사회보장, 보건,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회공공서비스분야³⁾ 비용 지출을 더욱 확대
- '90년대 지방선거 공약경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이미 많은 양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출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
- 전체 지방정부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증가는 '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직후에 편중('08→'09: 5.84%)되며 '08~'10년에 걸쳐 총 6.24% 상승

<표 3> 스페인 지방정부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비용 (2008~2010)

(단위: 천 유로, %)

	2008	2009	2010	증가율 ('08→'10)
ANDALUCÍA	27,419,245	28,995,220	28,926,496	5.50
ARAGÓN	5,431,370	5,767,150	5,799,554	6.78
ASTURIAS, PRINCIPADO DE	3,765,155	3,975,795	3,940,048	4.65
BALEARIS, ILLES	3,706,718	3,935,685	3,925,904	5.91
CANARIAS	7,366,950	7,671,206	7,561,344	2.64
CANTABRIA	2,032,509	2,122,722	2,113,521	3.99
CASTILLA - LA MANCHA	7,072,692	7,635,287	7,755,984	9.66
CASTILLA Y LEÓN	10,191,881	10,642,326	10,726,254	5.24
CATALUÑA	24,757,463	26,466,184	26,616,952	7.51
EXTREMADURA	4,236,260	4,481,007	4,509,012	6.44
GALICIA	9,372,684	9,917,519	9,923,729	5.88
RIOJA, LA	1,158,371	1,212,215	1,207,216	4.22
MADRID, COMUNIDAD DE	26,553,044	27,906,865	28,026,543	5.55
MURCIA, REGIÓN DE	5,001,531	5,347,432	5,377,745	7.52
NAVARRA, COMUNIDAD FORAL DE	2,697,108	2,847,024	2,856,207	5.90
PAÍS VASCO	9,460,745	10,035,570	10,225,615	8.08
COMUNITAT VALENCIANA	14,783,050	15,677,326	15,815,952	6.99

자료: INEbase / Spanish Regional Accounts. Base 2008 / Account serie, 『Tables by Autonomous Communities. Serie 2008-2011』

- 문화·교통시설의 무분별한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용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적자와 채무부담을 가중
 - 지역기반 공기업 중심의 공항·철도 등 지자체 SOC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며 지방채무 부담이 가중

2) 기획재정부,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2012

3) 스페인 지방재정 분류상 사회공공서비스 분야는 보건, 교육, 의무사회보장, 공공행정·국방, 기타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Government at a Glance at 2011』(OECD, 2011)에 따르면, '08년 지방정부의 국방(Defense) 지출은 무지출 상태로 '08~'10년간 국방비용이 지방정부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공기업 부채 관리를 통해 '11년 GDP 대비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표 4> 스페인 지방공기업의 부채 현황 (2005~2011)

(단위: 억 유로,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공기업 부채	99 (1.1)	116 (1.2)	140 (1.4)	161 (1.5)	207 (1.9)	234 (2.3)	232 (2.2)

주: ()안의 수치는 GDP 대비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
 자료: Banco de España, 『General government debt』, 2012

-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흡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력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부담이 중앙정부로 전이
 - 스페인의 중앙-지방 재정관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을 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으며, 지방정부 채무상환 불이행 시에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조⁴⁾
 - 지방정부 세입구분과 비중: 교부금(67%), 지방세(20%), 지방채 등 기타수입(13%)
 - 스페인은 지방분권화가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미약하여, 지방정부 연맹이 중앙정부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재정지원 확대 요구⁵⁾도 가능
 - 많은 양의 교부금을 배분해 줘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의 지출을 통제할 만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치적 수단이 부족
 - 예컨대, 지방정부 연맹이 중앙정부에 추가재원 조달을 요청할 경우,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확대 요구에 응하거나 지방정부 대신 채무상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
 - 따라서 지방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부담 증대 → 자금조달 능력 저하』를 초래하며 국가 부도 위기 직면을 촉발
- 지방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08~'11년 사이 2.2%에서 5.5%로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도 9.6%에서 16.9%(‘08→'12.Q1)로 확대, 이는 가뜩이나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중앙정부를 압박

4) 기획재정부,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2012

5) 기획재정부,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2012

<표 5> 스페인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2008~2011)

	(단위: %)			
	2008	2009	2010	2011
지방정부	2.2	2.6	4.1	5.5
중앙정부	3.0	9.4	5.0	3.0

자료: Banco de España, 『Liabilities outstanding and debt according to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2012

<표 6> 스페인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 (2008~2012.Q1)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Q1
지방정부	9.6	12.0	14.8	16.4	16.9
중앙정부	30.6	41.9	46.4	52.1	55.2

자료: Banco de España, 『Liabilities outstanding and debt according to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2012

- 스페인 지방정부가 현재 채권시장에서 사실상 채무상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들의 채무 지급불능 선언 시 국가부도 위기로의 확산은 피할 수 없을 것임.
- 일부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직전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스페인 지방정부들은 높은 금리 부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

<표 7> 스페인 8개 지방정부의 장기신용등급 하향조정 현황

	ANDALUCÍA	ASTURIAS	CANARIAS	CANTABRIA	CATALUÑA	MADRID	MURCIA	PAÍS VASCO
신용등급	BBB	BBB	BBB	BBB	BBB-	BBB	BBB	A

주: Fitch는 신용등급을 24단계로 책정하며 BB+등급 이하부터 투기등급으로 분류
 자료: Fitch IBCA, 『FitchRatings』, 2012.5 & 6

3. 시사점

-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낮은 수준의 국가부채에도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재정위기가 발발할 수 있음을 시사
 - 스페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 전인 2007년에는 GDP 대비 정부부채가 36%로, 당시 한국(31%)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급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스페인과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함.
 - '12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911조원으로, '11년 GDP의 약 74%
 - OECD는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1.Q3)을 154.9%로 산정하며 스페인의 140.5%보다 14.4%p만큼 높게 추산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부채가 양적으로도 급증하고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방재정 여건이 낙관적이지 못함.
- 지방채무의 양적 급증: 2008년 19조원이던 지방채무가 2010년 말 기준 29조원을 기록, 52.2%(10조원)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표 8> 지방채무 현황 (2008~2010)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자치단체 채무	19.05	25.55	28.99
(GDP 대비 %)	(2)	(2)	(2.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채무현황』, 2011.12월

- 지방채무의 질적 악화: 단기채무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⁶⁾, 신규발행 대비 채무상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

<표 9> 지방채무 상환기간 구조 (2007~2009)

(단위: 조원, %)

상환기간	2007	2008	2009
1-4년	0.3(1.5)	0.5(2.5)	3.3(13.0)
5-9년	5.0(27.6)	5.5(28.9)	5.4(21.3)
10년 이상	12.9(70.9)	13.1(68.6)	16.9(65.7)
합 계	18.2	19.1	25.6

주: ()안의 수치는 전체 채무규모 중에서 각 상환기간의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채무현황』, 각 년도

<표 10> 지방채무 신규발행 및 상환 추이 (2007~2009)

(단위: 조원, %)

	2007	2008	2009
당해 년도 발행	2.9	3.0	8.5
당해 년도 상환	2.4(81.8)	2.0(67.6)	2.2(25.9)

주: ()안의 수치는 발행액 대비 당해 년도 상환액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채무현황』, 각 년도

- 따라서 스페인과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지방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지방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함.
- 스페인 지방정부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확대와 무분별한 지역 SOC사업 시행 등이 지방재정 부실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도 이에 유의할 필요

6) 단기채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기 만기도래 부담이 커져 금융시장 유동성 위축에 취약성을 노출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만큼 단기유동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

- 사회복지·보건과 관련된 지출은 중앙정부에게도 재정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대응 지방비 부담이 늘어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

<표 1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 부담 (2006~2011)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감율
정부 총지출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6.8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9.46	11.26	15.85	19.27	19.22	20.50	17.6
국고보조사업(복지부 소관)	6.01	7.80	11.70	13.85	13.65	14.66	20.8
대응 지방비 부담	2.12	2.81	5.07	6.14	6.22	6.70	28.6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 년도 & 보건복지부(2011)

- 한번 늘린 복지는 줄이는데 상당한 저항력이 있으므로, 복지지출이 일단 늘어나면 다른 시급한 분야에 투입하거나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급증할 수 있는 정부부채에 대처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움
- 선심성 복지 지출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복지수준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결과적 평등을 목표로 하는 포퓰리즘 복지서비스 정책은 비용지출은 크게 늘리는 반면, 효율성이 떨어져 국민체감도가 저하되는 등 지속가능성을 저해
- 또한 지방재정지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대형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강화를 통해 무리한 대규모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모색
 - 선심성 행사·축제 비용 정비 강화를 통한 낭비성 지출 감축
-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
 - '10년 말 현재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62.9조원으로 '08~'10년 사이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자본 증가율(8.1%)보다 연 7.5%p 빠른 속도로 증가
 - 지방정부를 대신해 도시철도 건설, 도시개발(택지·대교·대로) 등 주요 사업을 벌이게 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

<표 12>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2008~2010)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자산	119.5	136.9	147.2	11.0
부채	47.3	58.2	62.9	15.6
자본	72.2	78.7	84.3	8.1

주: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과 간접경영
공사공단(지하철, 도시개발, 지방공단, 기타공사)으로 분류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2011.12 월

- 지방채무에 계상되지 않는 탓에 당장 부채로 여겨지지 않는 공기업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경우, 이는 고스란히 가격인상·사업축소 등 국민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채 형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o 공기업들은 예컨대 상·하수처리장, 정수장, 철도, 항만 등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형태의 자산이 대부분으로, 사옥 매각 외에는 유동성 문제 발생 시 자금조달에 매우 취약한 구조
 - 따라서 공기업의 부채를 정부 부채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그 여부를 떠나, 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업 부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 검토 불가피
 - o 정부대행 사업에 있어, 사업수익성에 근거한 공기업의 자율적 사업참여 보장·점검 체계 마련 필요
 - 아울러 공기업이 정부위탁사업 등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회계상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구분을 통해 정부부채가 공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o 이는 공기업의 재무운용과 정부의 재정운용 상 각 주체의 책임성을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임.
- 지출을 줄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원을 확충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
-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상황

<표 13> 2011년 지방정부 자원 현황

자체수입 83 조원 (58.9%)			의존수입 58 조원 (41.1%)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교부세	국가보조금
49.7 조원 (35.2%)	29.6 조원 (21.0%)	3.7 조원 (2.6%)	27.4 조원 (19.4%)	30.6 조원 (21.7%)

주: 순계세입예산규모 기준으로서, ()안은 총수입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 지방재정통계 지방예산현황』

-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등을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정상화 시키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세원확충 노력 지속 필요

- '09년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은 51%을 기록(미국과 일본은 80% 수준), 동기간 기준 근로자의 소득과약률(75.4%)과 20%p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며 여전히 근로자 소득의 투명도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⁷⁾
- '05.12월~'09.5월 사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세금탈루율은 48%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액현금이 오가는 부동산임대·호텔·여관·스포츠센터·주점·사우나 업종의 경우 탈루율은 62~98%까지 치솟음⁸⁾

7) 국세청 & 한국은행,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 자영업자 및 근로자 소득 신고금액』, 2011

8) 2011년도 국감 자료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2011